

민주연구원 '혐오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법적 규제'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직무대행 송창욱 부원장)은 11월 26일(수), 『혐오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』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
 - 송창욱 부원장은 “혐오와 차별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될 경우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”며, “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·제도 정비와 교육·캠페인을 병행하는 종합 대응이 시급하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혐오 개념을 정리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논의에 기여하고자 했다”고 설명했다.
- 이번 정책브리핑은 혐오의 개념·기준과 국제 논의, 해외 사례를 종합 정리하고, 한국 사회의 장단기 과제로 법·제도 개선과 교육 방향을 제안했다.
 - 첫째, 혐오를 단순한 감정이 아닌 ‘정체성 요소에 기반한 차별·폭력 선동 표현과 행위’로 정의한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, 혐오표현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.
 - 둘째, 혐오가 사회 분열, 정치 극단화로 이어진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, 형사 규제와 더불어 교육, 공공캠페인, 시민사회 활동을 결합한 대응이 필요함을 짚었다.
 - 셋째, 한국의 단기 과제로서 범정부 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고, 장기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DEI(Diversity, Equity, Inclusion) 교육을 통해 차별 예방과 사회통합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.
- 민주연구원 류이현 연구위원은 “이번 정책브리핑이 국회 입법 논의와 정부·지자체, 시민사회의 정책 설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, 혐오를 줄이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